

# 第225回国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5號(附録)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11月21日(水)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 【서면질의·답변서】

### (질의서)

#### ○玄勝一 위원

수학능력시험은 고졸생들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그 취지로 볼 때는 고교생의 평균학력에 기준을 맞추는 난이도로 출제되어야 할 것인데 금년 수능이 어려워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학입시에서 지필고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자의 학력을 평가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의 학력평가를 수능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별력을 갖는 수능으로서 좀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작년에는 수능이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고 각 대학에서 한숨이 쏟아져 나왔었다.

이런 점에서 금년도 수능시험 그 자체만을 볼 때는 출제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금년 수능도 이웃 일본이나, 중국의 수능에 비교하면 매우 쉬운 수준이다. 고교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금년 정도의 난이도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금년 수능 이후 터져나온 학생·학부모의 불만은 수능이 쉽고, 어려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졸업생끼리만 수능을 보았다면 쉬우면 다 같이 쉽고,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것이다. 특정학생에게 특정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년도 재수생들과 금년도 졸업생이 함께 수능을 치루었는데, 금년도 졸업생은 “공부 안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공허한 정책에 속은 이른바 “이해찬 1세대”들이다. 이것이 이 정부의 교육개혁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께서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에 의해, 지필고사를 실시하든, 수능만으로 선발하든, 수능마저 배제하고 선발을 하든 대

학에 맡기는 정책을 장기적 전망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고교생들이 잘못된 정책에 의해 성적이 저하되는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고교생의 실력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 (답변서)

####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 (金德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 (질 의)

듣기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과 듣기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송시설 점검, 테이프의 CD 제작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금년도 수능시험의 듣기평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모두 18건(사이버 소리함 15건 포함)으로 4교시 외국어(영어) 시험 관련사항이며, 예년도에 비하여 접수민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관련 민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는 듣기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난 해 전국의 학교방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스피커·배선설비의 노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 23억 8000만 원의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엠프, 스피커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고, 모든 시험장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제공하였으며,

-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학교방송시설 점검 철저 및 보수·교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듣기시험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듣기평가 방송테이프 제작은 스튜디오에서 외부의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고 디지털 편집설

비를 사용하여 양질의 음질로 녹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학생들이 듣기평가를 보다 나은 음질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테이프의 CD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재정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실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실천장 흡음시설의 경우 신·증축되고 있는 학교시설에는 시공되고 있으나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시설에는 천장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조 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연차적으로 흡음천정 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金貞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듣기시험과 관련하여 접수 민원과 스피커 및 테이프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 의사와 그 개선방안, 듣기시험 도중 발생한 문제처리를 위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침의 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도 수능시험의 듣기평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모두 18건(사이버 소리함 15건 포함)으로 4교시 외국어(영어) 시험 관련사항이며, 예년도에 비하여 접수민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관련 민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듣기평가 방송테이프의 경우 녹음상태에 관하여 2차에 걸쳐 확인하고, 시행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험장 당 보조테이프를 3개씩 배부하였으므로 테이프 상 녹음의 하자 및 청취 곤란에 따른 문제는 적으리라 판단됩니다.
- 스피커를 포함한 방송시설은 시험장 선정 시 듣기평가 방송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시험실시 학교 자체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방송시설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 특히 듣기평가 시작 전에 음질 테스트를 위한 안내방송을 3분여간 실시하여 청취적응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음질상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 확인이 가능하고,
  - 만일 시험실시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험감독관과 시험장 책임자가 상호 협의하여 “건전한 상식선”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지난해에 듣기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고 예산지원(23억 8000만 원)으로 전국 학교방송시설의 실태를 파악·점검하여 노후한 스피커, 앰프 등을 교체·보수하였고, 시험 중 정전 사고에 대비하여 무정 전 전원장치를 제공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학생들이 듣기평가를 보다 나은 음질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소관부서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환원하는 문제와 수능시험으로 허탈한 수험생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먼저, 금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을 지도한 선생님들이 예상하지 않던 충격을 받은 데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체제의 이원화는 문제는 관련 부서(국무조정실)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 부는 향후 금년도 수능시험 채점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의 난이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심층분석 결과 책임을 질 사항이 확인되면 필요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金敬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무조정실 산하로 있는 것이 불합리한 것 인지와 수능시험 전담기구의 신설과 편제의 개편 검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체제는 앞으로 관련 부서(국무조정실)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우리 부는 향후 금년도 수능시험 채점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의 난이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玄勝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대입에서 지필고사 실시여부, 수능 반영여부 등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는 우리 부의 “대학자율화”의 정책들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부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사회문화적 여건,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 등과 관련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소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고사 제한, 기여입학제 금지 등은 바로 이러한 “최소기준”에 해당하며 기타 수능반 영여부를 포함하여 전형기준, 방법 등은 완전히 대학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질 의)

고교생들의 성적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고교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최근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한편, 학력에 대한 우리 부의 목표는
  - 단편지식 축정과 서열위주 평가에 의한 학력지양
  -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초학력을 모든 국민이 갖추는 것입니다.
- 또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으로서
  -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목표와 학업성취기준을 토대로 초·중등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기적 추진
  - 목표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책임 지도하는 등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초·중등학생의 학력수준과 관련한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 주관 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1999년도 : 38개국 중 수학 2위, 과학 5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金成東 (金貞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재이관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99년 이전 소관별로 주무부처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에
  -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력이 수행하는 연구에 주무부처가 직접적인 관리통제를 함으로써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9년 국회와 정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무총리 산하로 일원화하였음.
- 그 이후 약 2년반 동안 연구기관 운영체제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 연구회 이사회에서는 연구원장 선임, 연구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능조정 등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 그 외 조직·인사·예산운용 등 연구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은 연구원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 국무총리는 연구기관의 감독청이기는 하나 자율적인 연구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등의 지원기능과 위법·부당사항 등 개별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일반적 감독기능을 수행하므로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위시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99년에 출연연구기관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취지를 감안할 경우 현 체제하에서 수능시험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보장 및 동 업무의 상시관리를 위한 체제정비 등의 보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판단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회 이사회,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金敬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재이

관하거나 동 연구원 내에 수능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 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99년 이전 소관별로 주무부처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에
  -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력이 수행하는 연구에 주무부처가 직접적인 관리통제를 함으로써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9년 국회와 정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무총리 산하로 일원화하였음.
- 그 이후 약 2년반 동안 연구기관 운영체제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 연구회 이사회에서는 연구원장 선임, 연구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능조정 등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 그 외 조직·인사·예산운용 등 연구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은 연구원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 국무총리는 연구기관의 감독청이기는 하나 자율적인 연구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등의 지원 기능과 위법·부당사항 등 개별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일반적 감독기능을 수행하므로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위시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99년에 출연연구기관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취지를 감안할 경우 현 체제하에서 수능시험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보강 및 동 업무의 상시관리를 위한 체제정비 등의 보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판단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회 이사회,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